정세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경제 대통령 되겠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소득 4만불 시대 달성·공공아파트 반값 공급" 이낙연·이광재·김두관 등 대권 후보들과 현역의원 40여명 참석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 제 대통령'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 도 끝도 경제"라며 소득 4만불 시대 달성, 공공임 대주택 공급, 돌봄사회 등 구체적 구상을 제시했 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며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해 확대하자"고 했다.

또 자신이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 (모든 신생이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 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찬스'를 제공하

자"고 했다.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 혁신기업 육성 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청년과 서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공공 분양 아파트)15만호는 반값아파트로,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면서 "2030 세대에 대한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출마선언식에는 민주당 현역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것은 물론 이낙연 전 대표와 이광재, 김두관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도 모습을 보여, '반(反)이 재명 연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왜곡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민주 광주시당, 국민의힘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국 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은 부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당은 "한기호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 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다"며 "그 주장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당히 남겼고, 이에 대한 보도도 끊이질 않았다. 그 외에도 그가 남긴 막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광주의 아픔을 단 3일 만에 잊어버린 것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러고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25%·윤석열 24%·이낙연 7%

4개 기관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가 다시 팽팽해졌다는 여 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 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 한가'를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24%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전주 보다 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변화가 없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로 윤 전 총장 (20%)에게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

인트) 밖에서 앞섰으나 다시 좁혀진 것이다. 더불 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와 같은 7%를 기 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 무소속 홍준표 의원 2%이 뒤를 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 답은 23%, 모름·무응답은 9%였다.

대권주자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의 호감도가 50%, 윤 전 총장의 호감도가 43%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의 호감도는 33%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9%였다. 양당 모두 2% 포인트씩 상승했다.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이 3%로 집계됐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건축물관리법·중대재해법 보완…안전 법안 봇물

정치권 광주 붕괴참사 후속대책 분주

철거현장 안전진단 의무화

민주, 지역안전 프로젝트 가동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공사 현장 안전과 관련한 입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 다. 또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이 총동원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 동,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 서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료로 참고할 계 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는 변 화와 혁신, 세대교체에 이어 시민 안전이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민 안전 입법 봇물=민주당은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에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개 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 획이다. 국민의힘에서 협조한다면 6월 안에 충분 히 통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산업재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 배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법이 건축물 관리법"이라며 "그 법 개정을 포함해 원·하청간 관 계를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꼼 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입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당장 이날에만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건축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실시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 갑) 의원은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 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 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안전 프로젝트 가동=민주당은 광주 건설 붕괴 참사를 계기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총동원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건설 공사 현장, 건설 구조물해체 현장, 수해 우려 지역, 복구지역 등 재난 취

약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지방선거 공천과 연계하 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산업재해 TF 팀장인 김영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 계,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 소속의원들에 대 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되는 시설들을 철저하게 점 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이는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안전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국책사업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3년 간 제한하겠다"며 "대형회사들의 경우 뇌물 받은 CEO가 처벌받으면 국책사업에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 공천 자료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는 아주 좋은 기획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자료로 사용할 경우, 자치단체장들의 안전 행정 사례나 지방의원들의 안전 조례 제정등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네 062)531-3530, H. 010-9229-3530